차기 더민주 지도부, '친문'간의 경쟁구도

대표 경선 김상곤·송영길·추미애 3파전 속 이종걸 '고심'

부문별 최고위원 자리 놓고도 친문 성향 인사 잇단 도전장

차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색채가 친문(친 문재인) 성향을 강하게 띨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가 다음달 27일 실시되지만 대표 경선에 나서는 주자들이 모두 친문 성향인데다 유력 최고위원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친문 및 친노(친노무현) 성향이기 때문이다.

최근 더민주 내부에서는 전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광역위원장 주자들 사이에서는 물 밑 교통정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로 후보 간의 '단일화 담판'이 이어지면서 경쟁 구도가 합의추대나 양자대결 양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는 광역시도당 위원장 가운데 일부를 지역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시스템인 만큼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최고위원 경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당내 최대 계파이자 강한 응집력을 보여주는 친노·친문 진영이 단일화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 최고위원에도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 인사들이 도전장을 잇달아 던지고 있어 차기 지도부에서 친노·친문 인사들의 비중은 매우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경기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윤호중, 전해철 의원은 최근 조율을 거쳐 친문 성향의 전 의원으로 단일화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이언주 의원과 도당위원장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친문 성향의 최인호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강원에서도 유일한 현역 의원인 송기헌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심기준 현 도당위원장이 유력한 단일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충청 지역도 경선보다는 합의추대 형식으로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이상민 의원과 친문 성향의 박범계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선 보다는 합의 추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현재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친문 성향의 도종환 의원 쪽으로, 충남에서는 역시 친노 성향의 박완주 의원 쪽으로 단일 후보 추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서울이나 호남에서는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은 김영주, 박홍근, 전현희 의원의 3파전이 될 전망이다.

광주에선 박혜자 전 의원과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이병훈 동남을 지역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전북의 경우 이춘석 의원과 김춘진 전 의원이, 전남에선 이개호 의원과 김영록 전 의원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위원장 선출이 완료되더라도 최고위원 5명에 진입하는 것은 서울·제주에서 1명, 인천·경기에서 1명, 영남 1명, 호남 1명, 강원·충청 1명 등으로 정해져 있어 권역별 신경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부문별 최고위원도 친문 성향 인사들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대진표'가 정해지고 있다. 더민주는 여성, 노동, 청년, 노인, 민생 부문에서 최고위원 1명씩 5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여성 부문 최고위원에는 유은혜 의원과 양향자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이, 청년 부문에서는 김병관 의원과 이동학 전 혁신위원이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다. 타 최고위원 부문도 친노 및 친문 인사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당의 구조가 친노·친문 성향이라는 점에서 전대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도 결국 친노·친문 인사의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당이 친노·친문 프레임에 갇혀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대표 출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 출마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7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추미애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 좌측부터〉 /연합뉴스

국민의당 내년 초 전대론 부상

"현안 해결 뒤 지도체제 정비"

호남 일부의원 조기 전대 주장

국민의당 내에서 내년 1~2월께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일단 자리를 잡은 만큼 눈앞의 현안을 해결한 뒤에 전대를 열어 지도체제를 정비하자는 주장이다.

당장 당권경쟁보다는 올해 정기국회에 사활을 걸어 제3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당헌·당규 정비와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 정비, 당원 모집 등을 전대 개최 준비도 만만치 않다는 현실론도 내년 초 전대론의 근거다.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24일 "12월까지 국회에서 수많은 변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전대를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라며 "비대위 체제가 길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 1~2월께 전대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연말까지 각종 쟁점법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놓고 3당 간 진검승부가 벌어질 판에 전대 개최에 전력을 분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기전대론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한 호남의 다선 의원은 "당의 틀을 빨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전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 전대론을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고려해 12월께나 전대 개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리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대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연말이냐, 연초냐'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논쟁거리가 되기 힘들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비방하면 처벌 받는다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법안 동시 추진 나서

국민 토론회서 특별법 개정안 필요성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을 차단하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당론 발의했고, 더민주도 이개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오는 8월 임시 국회에서 당론 법안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정의당도 내부적으로 당론 입법을 검토중이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2일 5·18 역사 왜곡 대책위 등 관련 단체들과 국회에서 '5·18 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세 당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 5·18 민주화 운동의 왜곡을 막는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가 1987년 개헌을 통해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의 뿌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제반 법률을 인정해서 광주의 희생자 보상 절차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세력이 이를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일부 인사들이 박지원은 빨갱이고, 광주 5·18은 북한에서 내려온 몇 백 명의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계속 폄훼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빨갱이로 몰아간다면 광주시민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빨갱이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독일에서도 나치 옹호에 대해선 가차 없이 제재를 한다"면서 "비뚤어진 역사관이나 민주주의관을 개인의 취향문제로 보거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방치해도 좋다는 그런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토마스 잔트퀼러(Thomas Sandkuhler)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역사교육학자는 유대인 대량학살에 대한 부정 행위나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및 도발을 형사처벌해 독일 사회가 새로운 나치주의 확산을 막았다고 밝혔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표현의 자유란 진실에 기초해서 존중받는 개념으로, 허위사실 대량유포와 사회적 기본가치 훼손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5·18은 한국 민주화 진전의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왜곡행위의 근본적 처방을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